

교육부, 지역 맞춤형 교육·취업 지원으로 지역에서 배우고 정주하는 생태계 조성

- '라이즈'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고도화, 5극3특 균형성장 뒷받침
- 엄정한 성과평가와 환류를 통해 실효성 중심의 '선택과 집중' 실현
- 지역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지방정부·대학의 역량 결집
- 17개 지방정부 간 협업 촉진으로 5극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
- 【관련 국정과제】 55-2. 지역산업과 국·사립대 동반성장을 위한 라이즈체계 재구조화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2일(목), 지역 성장을 견인할 지역인재의 정착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란 17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체계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라이즈, RISE)'라는 명칭으로 출범했으나, 지역 균형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아 명칭을 재정립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1년간 관찰된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를 발전시켜,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고자 수립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업 운영을 타파하고, 지역학생과 인재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재편한다. 또한, 지방정부 간 칸막이를 넘어선 초광역 단위의 인재 양성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성과평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활용한다. 작년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엄정히 평가해 올해 사업예산을 과감히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① 지방정부의 대학 선정·지원 과정에서 '예산 나눠먹기'가

없었는지, ②지방정부-대학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③학생·인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17개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역학생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대학의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

< 참고 : 우수사례 >

- ▶ (사례①) 약 300명의 학부, 석박사생 대상 6개월~1년 단위 대학-기업 협력 연구개발(R&D) 연구지원금(펠로십)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방 연구 인력의 실무 연구기회 보장
- ▶ (사례②)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시제품 제작→ 창업→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창업지원 구조를 구축해 학생 특허 21건, 기술이전 11건 등 성과 창출 지원
- ▶ (사례③) 대학 입주기업 재직자와 재학생의 협업으로 '40시간 몰입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교육'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지역 수요 기반의 전문인재 양성
- ▶ (사례④) 지역의 대학-산업체 간 인력 부조화(미스매치) 문제 완화를 위해 16개 대학-292개 기업 협약으로 취업보장 계약학과 설치, '26년 약 560명 신입생 입학

둘째,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정부별 대학 지원 사업을 학생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지난 1년간 각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과 대학 강점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 수혜자인 학생과 인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계약학과, 장기 직무실습(인턴십) 등 학생의 안정적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 협업 과제를 확대하고, 지역 학생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교육과 창업 기반(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한다.

< 참고 : 2025년도 지역별 대표 과제 사례 >

- ▶ (출연연 연구협력) 출연연-대학 연계로 과학기술 연계 혁신 역량을 결집시켜, 지역산업 수요를 바탕으로 인재양성-연구개발-사업화의 혁신모델 구축
- ▶ (연구개발(R&D) 기반 실증 스튜디오)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대학 내 실증 스튜디오 공간 조성
- ▶ (스타트업 캠퍼스 구축) 지역 내 창업벤처펀드 투자와 연계하여, 청년의 지역 핵심산업 분야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정주 확대
- ▶ (1시군-1대학-1특성화 프로젝트) 기초지자체와 대학 간 연결(매칭)로, 대학 역량을 활용해 시군구의 특화 산업을 발전시키고 청년 유출 예방

셋째, 국민주권 정부의 5극3특 발전전략에 발맞춰 지방정부 간 협업 기반의 초광역 단위 사업을 2,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5극3특 권역 단위로 지역대학이 협력하며 인재양성·연구를 수행하는 ‘5극3특 권역별 공유대학’ 모형(모델)을 도입해, 권역 전체의 역량을 결집한다. 또한 5극3특별 전략산업인 ‘성장엔진’ 분야별로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기업-대학 협업 모형(모델)을 지원할 계획이다.

< (참고) 정책 재구조화 주요 내용 >

구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25)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26.~)
예산	'25년 19,410억 원 (추경)	'26년 21,403억 원 ※ (증액) 5극3특 단위 인재양성 등
성과 관리	지방정부 컨설팅 등 성과창출 지원	교육부의 지방정부 대상 '25년 사업 평가로 '26년 예산 차등지원 ※ 교육부 평가 전 지방정부는 대학 대상 '25년 사업 자체평가 실시
시도 중점 사항	시도별 라이즈(RISE)사업 출범 (대학 선정, 사업비 교부 등)	학생 중심 지원 강화
지원 단위	17개 시도 단위	17개 시도 단위
	-	+ 초광역 단위(5극3특 등)

교육부는 이번의 재구조화 이후로도, 5극3특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고 지방정부 간의 재정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안을 계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호 연계·협력에 노력하는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지원, 지역의 특성과 발전 정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방식 도입 등을 추가 검토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역점 정책인 ‘5극3특 발전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지의 청년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범정부 국가균형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지역대학을 혁신 중심(허브)으로 육성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주 인재가 확대될 수 있게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재구조화)

담당 부서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지원과	책임자	과장	최우성 (044-203-6232)
		담당자	사무관	최문석 (044-203-6239)
			사무관	이효선 (044-203-6244)
			주무관	김지수 (044-203-6241)

